

文대통령, 국회의장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청

靑 “지난 24일 국회의장에게 정식 요청 공문 발송”... 7월 출범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청와대가 26일 밝혔다. 공수처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월15일까지 이상 없이 출범해야 한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수처법 제5조에 따라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5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는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는 국회에 두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이 박 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직 구성조차 못 마친 국회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를 조속히 가동시켜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후보자추천위가 먼저 구성돼야, 후보자 추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공수처법 6조에는 국회의장에게는 후보자추천위원의 임명·위촉 권한과 함께 회의 소집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박 의장에게 직권으로 후보자추천위 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다만 청와대가 공수처법 5조만을 언급한 것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천해달라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상의 원칙을 의미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는 7월 15일까지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출범에 따른 절차가 완료 된다”고 말했다.

후보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다. 여기에 여야 각 2명씩 후보추천위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

과 맞물려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 지정을 거부하면서 후보추천위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법 제6조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과 소집 요건을 다루고 있다. 국회의장이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14일 공포된 공수처설치법에 따라 공포 6개월 후인 7월15일까지 설립돼야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출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 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전북도, 상반기 퇴(이)임식 개최

총 46명 현직 마무리

전북도는 지난 26일 오후 3시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과 퇴(이)임자의 가족 및 동료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상반기 퇴(이)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퇴(이)임식은 코로나19로 방역 관련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간소화해 진행됐다.

마스크·리텍스 장갑·비대면 체온계·참석자 명부 등을 비치하였으며, 특히 공포패 수여 및 기념사진 촬영 시에도 신발 모양 스티커를 비대에 부착하여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퇴(이)임자들은 오랜 시간 묵묵히 내조해준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동료·후배들과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공

직 생활을 회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보냈다.

송하진 도지사는 송별사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직자로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코로나19로 상대한 환송식을 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한다”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안동환 퇴(이)임자 대표는 퇴임사를 통해 “지난 40여년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언제나처럼 활기찬 도정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 상반기 총 46명(정년퇴직 11, 명예퇴직 5, 공로연수 30)이 현직을 마무리하게 된다. /유호상 기자

제5기 전북 청년정책포럼단 출범

지역 청년과의 소통창구인 전북도 청년정책포럼단이 새롭게 출범했다.

전북도는 최근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제5기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90여명의 위원들이 온라인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별 청년센터(9개소)와 사무실, 커피숍 등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했다.

청년정책포럼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소통협의체로, 2016년부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개소된 전북청년허브센터와 지역 소통공간(조성, 남원, 김제) 사업 등도 청년정책포럼으로부터 제안된 정책 중 하나이다.

도는 그동안 전주청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포럼 구성을 탈피하고 지역청년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시군별로 청년협의체, 청년활동가 2~3명씩을 추천받고 일부 위원은 온라인 공모로 모집하여 총 93명의 위원으로 포럼단을 구성했다.

제5기 청년정책 포럼 위원에는 대학생, 직장인, CEO, 문화예술인, 농업인,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청년일자리, 창업, 문화, 농업, 복지 등 8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올해 12월까지 청년소통·협력창구로 지역청년 참여 주도로 청년문제를 조사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개선방안 제시 및 의제 발굴 등의 역할과 함께 청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하게 된다.

이날 개최된 발대식은 임세은 표청년소통정책관, 시도 청년대표 등의 축하영상과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지역별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최근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 제5기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90여명의 위원들이 온라인 화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별 청년센터(9개소)와 사무실, 커피숍 등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참여했다.

경실련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편법증여 의혹 해명하라”

경실련이 최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을)에게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매입 자원의 출처와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자본금이 3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영입실적이 없었던 이스타홀딩스가 무슨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편법적인 승계 또는 증여의 의혹이 불거질 수 있고, 증여세 납부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상직 의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자녀들은 400억원 가량의 매각차익을 누리는 반면, 1600명 정도의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5개월 가량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주주로서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직 의원은 물론, 지배주주로 있었던 자녀들은 직원들의 급여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

에 나서야 한다”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자녀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와 편법 증여 의혹 및 증여세 납부,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까지 국민들에게 낱알이 소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의원이 구체적인 소명을 하도록 독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장·차관급 인사 단행

전현희 권익위원장·김창룡 경찰청장·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59) 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찰청장에 김창룡(56) 부산경찰청장을 내정자로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위원장 후보자와 김 내정자는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만 임명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한 전 신임 위원장은 부산 데라사여고를 나와 서울대 치의학과, 고려대 의료법학 석사 학위를 수료했다.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대한의료법학회 이사로 일하다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위원,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18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약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

한 위원장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임명돼 이효성 전 방통통신위원장의 잔여 임기 1년을 채우고 연임하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31일까지다.

한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대전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 중앙대 언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회사 생활을 하다 1998년 사시 40회로 법조계에 입문해 2000년대 초부터 ‘삼성 X파일 사건’을 비롯한 MBC의 소송사건을 수행했다. 이를 계기로 2009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과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등을 지냈다. 이 밖에 한국피디연합회 자문변호사, 한국케이블TV협회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김 청장 내정자는 부산 가야고를 나와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정보와 민생 치안 분야를 두루 거쳤고 경찰청 정보1과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주미합중군국대한국대사관 주재관,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부터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으로 일했다.

민 청장은 다음 달 23일까지 2년의 임기를 마치고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경찰청장은 청와대가 내정자를 발표하면 행정안전부가 경찰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 7인으로 구성된 경찰위원회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내정자를 진행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후보자로 제청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임명하게 된다. 김 청장 내정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경찰청장에 오르게 된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